

도시, 인권, 환경, 그리고 정의

공진성 (조선대 정외과)

도시, 인권, 환경, 정의, 이렇게 추상적이고 큰 개념들을 함께 다루는 것은 무모하리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느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늘의 토론을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 도시

오늘날 도시는 국가 안의 하나의 행정 단위이지만, 과거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폴리스'(polis)나 '키비타스'(civitas)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완결된 하나의 정치적 단위였습니다. 정치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럽어) 용어들이 여기에서 비롯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오늘날의 국가(state)와 구별하기 위해 이를 흔히 '도시국가'(city-state)라고도 부릅니다.

도시가 국가였다는 것을 먼저 강조한 이유는 도시가 본질적으로 배타적·차별적 공간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공간은 안과 밖을 구별하고, 거기에 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비-시민입니다. 시민의 필요에 의해 안과 밖의 구별, 즉 배타적 공간이 생겨나지만, 마찬가지로 시민의 필요에 의해 때때로 이 구별은 흐려지고 배타적 공간은 열립니다. 바깥의 비-시민은 상인으로서, 귀화한 시민으로서, 노예로서, 이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재생산을 위한 아내로서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깥과 안은 연결되지만, 구별의 논리는 지속되고 차별적 권리 부여도 계속됩니다.

도시는 조직된 힘입니다. 그 힘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는 필요한 것을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깥으로 팽창하기도 합니다. 안이 너무 비좁아서 팽창하기도 하고, 바깥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그곳을 안정화하기 위해 팽창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팽창은 도시의 필요를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팽창한 도시를 흔히 '제국'(imperiu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공간, '주변'이 생겨납니다.

주변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닙니다. 문명도 아니고 야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변은 안이면서 바깥이고, 문명이면서 또한 야만입니다. 시민도 아니고 비-시민도 아니지만, 시민이면서 동시에 비-시민입니다. 이런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도시는 계속 제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도시는 제국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외부화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집니다. 이른바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표제어 아래 분석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설을 해결하는 열쇠는 보편화입니다. 원칙적으로 바깥도 안이 될 수 있고, 야만도 문명이 될 수 있으며, 비-시민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상적 차이를 넘어서는 본질적 공통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깥이 아닌 공간, 주변이 생

겨냅니다. 이 일에 기여한 것이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보게 하는 기독교와 그것의 세속적 형태인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근대의 인권 사상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최소한 잠재적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팽창된 도시, 즉 제국을 유지하는 일의 관건입니다. 그것이 바깥이었던 주변을 안처럼 만들고[문명화], 그렇게 하는 데에 드는 (초기)비용을 안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듭니다[문명화 사명]. 그러나 그것이 안과 밖의 구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도시의 필요에 의해 팽창한 것이고, 팽창한 도시의 유지를 위해 보편화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보편화를 위해 도시와 도시의 팽창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인권

도시의 논리는 인권의 논리와 반대됩니다. 도시는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고, 인권은 차별 없는 보편적 권리를 주장합니다. 도시의 논리는 구심적이고, 인권의 논리는 원심적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그 상태의 유지에는 인권의 논리가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그 논리가 계속해서 관찰되어 바깥이 사라지면 도시는 결국 해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편주의적 논리가 지나치게 확산되면 특수주의적 논리가 등장해 그 해체적 전개를 가로막습니다. 특수주의적 논리는 특권의 상실을 우려하는 도시에서도 생겨나지만,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는 주변에서도 생겨납니다.

보편주의적 인권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 단지 특권이나 정체성 상실의 우려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의 논리가 실제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우려에서도 비판은 제기됩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이 시민으로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 보편적 인간이 되지, 처음부터 보편적 인간으로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보편적 관념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구체적 경험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경험, 즉 시민으로서의 경험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면, 그 추상성이 구체성을 얻게 되어 오히려 시민적 삶의 토대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당대에 유행처럼 퍼지던 계몽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비판하며 감성의 회복과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의 논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유하자면, 초점 거리가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지만, 즉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선불리 초점을 다른 대상에 맞추면 의도하지 않은 곳이 초점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고유하게 안고 있습니다. 루소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이 보편주의적 주장을 경계한 이유입니다. 보편성(먼 것)은 특수성(가까운 것)을 토대로 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만 제한적으로나마 도달할 수 있지, 특수성(가까운 것)을 무시하고 단번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심 범위의 좁음과 상이함을 보라.) 그래서 보편성 주장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는 보편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편파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환경

환경은 바깥입니다. 흔히 '자연(환경)'이라고 일컫는 것만 환경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타인 또한 (인간)환경입니다. 인간 일반이 자연환경을 필요로 하듯이, 개인도 타인(인간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개체는 바깥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치 도시가 그러하듯이, 자기의 보존을 위해 주변-환경을 자기화하려고, 자기처럼 만들려고, 즉 자기에게 이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환경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인간환경의 반응은 대개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변-환경을 자기에게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와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홉스가 말하는, '각 사람의 각 사람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멸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지닌 힘과 권리를 버리고, 그렇게 버려진 힘과 권리를 조직하여 공동의 운명을 가지는, 공동의 환경을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 바깥이 없는 안을 만듭니다. 이것이 도시/국가의 탄생에 관한 홉스의 이론적 설명입니다. 이제 시민은 서로 각자에게 바깥(환경)이 아니라 안이고, 국가(시민사회)의 바깥만이 진정한 바깥이고 환경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 안에는 바깥이 없어야 합니다. 바깥이 있다면,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즉 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홉스는 주권의 분열, 즉 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홉스가 쓴 책 『리바이어던』의 저 유명한 표지 그림은 국가를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생존을 위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위험의 원천인 바깥을 외부화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단일하게 봐야 하고, 단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며, 단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주권자가 교권과 속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권과 속권이 분리되면 시민이 하나의 몸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종교가 그저 종교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자연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도 결코 무매개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media),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언제나 있고, 또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일할 때, 그것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지만, 이것이 다양하거나 파편적일 때, 그것들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또는 파편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게 됩니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메시지보다 매체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현대의 매체이론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오늘날의 매체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매체도 다양해졌고, 없던 매체도 새로 생겼으며, 매체가 연결시켜주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를 단순히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홉스가 이론적으로 구상한 것과 같은, 단순한 안과 밖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시민의 운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동일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를 가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에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있고, 언제나 복수의 시민사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무수히 많은 국가들과 시민사회들이 등장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른 매체의 영향력에 의해 그 힘이 쉽게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4. 정의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의 논리, 그와 대립되는 인권의 논리, 그리고 사람을 둘러싼 각종 환경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그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주제인 정의의 문제를 부득이하게 짧게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의(올바름)에 관한 고전 중의 고전인 플라톤의 『폴리테이아(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경우에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대된 인간인 국가에서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왕 이야기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올바름은 도시의 올바름, 폴리스의 올바름입니다. 폴리스가 올바를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올바를 수 있다고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그 올바름이란 바로 각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달리 말하면, 사람의 각 부분이 '제 일'을 온전히 하는 상태가 바로 '올바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는 도시를 플라톤은 '아름다운 도시'(kallipolis)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시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의 '올바른' 상태에 대한 앎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앎'과 '힘'을 겸비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플라톤은 이 '올바름'을 폴리스 바깥에까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바른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했습니다. '인간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찌면 적절한 단절, 즉 안과 밖의 구별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정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정치적 단위(국민국가 또는 세계국가)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복잡한 매체 환경의 영향 아래, 그 확립이 더욱 요원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정치적 단위마저 해체되어가는 데에서 비롯하는지 모릅니다. 이를 '공화국의 위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적·사회적·매체적 '환경'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해에 기반하여 새로운 '공통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가능성'의 문제로 확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